



공영방송 정치독립



이번에는
완결하자

2016. 7.
특별다수제 포함한
일명 **박홍근 의원 안**



이사회를 13명으로 증원.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추천. 사장 임명 또는 해임 시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특별다수제' 도입. 정치적 후견주의를 명문화한다는 비판 제기됨.

2016. 12.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故 **이용마** 기자 면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적장치를 확실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2018. 12.
방송미래발전위원회(방통위자문기구),
의견서 국회 제출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확대. 이 가운데 3분의 10 이상은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로 구성.

2020. 6.
이사회 13명 증원, 1/2 이상
KBS구성원, 학계·시민단체가
추천. **정청래 의원 안**



이사는 13명으로 증원. 전체 2분의 1 이상을 KBS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 사장 임명은 국민 50%와 소속 구성원 50%비율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 제청.

2020. 8.
여당 7, 야당 6 추천,
박성중 의원 안



이사회는 13명으로 확대.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 사장 임명 제청은 사장추천위가 추천한 인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020. 11.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
도입. **정필모 의원 안**



방통위가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뽑은 후보 가운데 13명을 이사로 선출. 사장 임명제청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특다제'로 의결.

2021. 1.
여당 6, 제1야당 6, 방통위3
허은아 의원 안



이사회 15명으로 증원. 여당이 6명, 제1야당 6명, 방송통신위원회가 3명 추천. 사장 임명 방식은 현재와 동일.

2021. 3.
방송·미디어 단체, 사측,
교섭대표노조도 추천권 배정
전혜숙 의원 안



이사회 13명으로 확대. 여당 4명, 야당 3명, 방통위 전원 동의한 2명, 방송·미디어 단체 2명, 사측 1명, 교섭대표노조 1명 추천. 사장 선임 시엔 후보 시청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가 임명 제청.

2022. 4.
이사회 → **25인 운영위원회**
독일식 방송평의회 모델 안 발의 (민주당 당론 채택)



정치적 후견주의: 갈등의 씨앗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줄기차게 지배구조 개선을 외쳐온 건 공영방송 KBS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현 이사회 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제 46 조
공사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VS

이사회를 25인 운영위원로...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을 11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거대 양당은 암묵적으로 '7대 4'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왔고, 이로 인해 정치적 후견주의가 공영방송에 뿌리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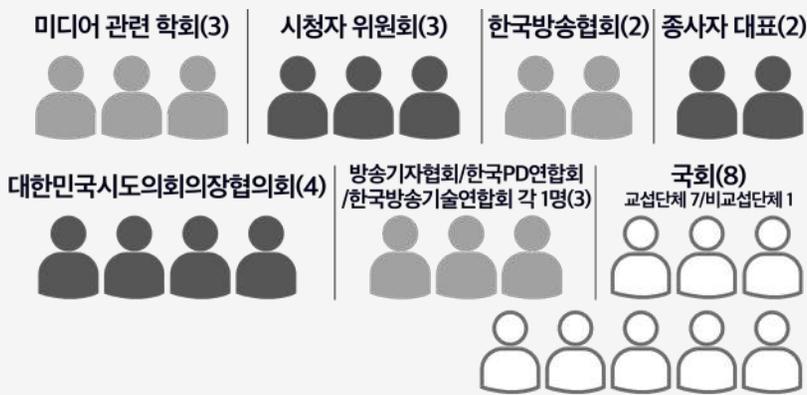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여야가 추천한 이사로 구성된 11인 체제의 이사회를 25명 운영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정권 교체기 마다 사장 방송 장악 논란과 편파성 논란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구성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공영방송이 공적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Q&A

25인의 운영위원회는 누가 추천하나?



각 분야에서 공모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추천된 이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데, 이 때 특정 성별이 70%를 넘어선 안 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사장 선임은 어떻게?

개정안은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의되어온 특별다수제를 받아들인 것으

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운영위원들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일보한 개정안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치권의 운영위원 추천권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현 이사회 체제 보다는 공영방송 내 팽배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정안의 통과여부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 공영방송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견어내고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탈바꿈할 것인가, 아니면 때마다 정치권력에 휘둘리며 국민과 구성원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방송으로 퇴행할 것인가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현재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즉각 처리하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 두 가지 방향의 고민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 전 KBS 이사



저는 2018년 9월1일부터 KBS 11기 이사로 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KBS 이사회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구성되는 터라 저 역시 어느 정당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닷바람에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KBS 이사로 들어온 경로는 각기 다르지만 일단 이사가 되었으면 KBS 강령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똥폼을 잡을 요량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파쟁의 와류에 몸을 던지려니 겁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압박하게 보신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정파의 꼬리표를 달고 보낼 삼 년 세월이 아득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는 대의를 품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그렇게 한 게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추천한 정당의 의원회의에서 불편한 얘기가 오갔던가 봅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면서 평소 저의 주장을 환기해주었습니다. “제3당은 거대 양당의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마라. 거대 양당을 ‘넘어서’ 삼각형의 꼭지점 만들기(triangulation)를 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KBS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다양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개의 거대 정당이 KBS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양극단을 오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다양성이 구현되어 제3, 제4, 제5의 정치, 사회적 힘이 함께 작동하여 상호견제, 완충, 조정하도록 하면 좀 더 균형과 안정을 잘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공영매체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현실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 절차와 방법으로 KBS 거버넌스를 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숙의민주주의는 판단이 변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전환의 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정파에 따른 진영논

리를 고집하고 전문가들은 자기가 구축해 놓은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능란한 확증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인지, 학습, 토론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의 판단, 선호를 확인하는 여론조사에 비해 속의 과정을 거친 공론조사가 진실보한 민주적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KBS는 이미 사장 선출에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속의 과정을 반영한 바 있고 그것의 장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KBS 수신료 의제가 문턱에 걸려 있을 때 속의 공론조사를 하여 돌파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환경도, ‘여론’조사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속의를 통한 ‘공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사회와 양승동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마조마하면서 속의 공론조사 과정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공론조사를 열어보니 국민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KBS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길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냐는 이슈에 대해서 공론조사는 KBS가 자체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해 놓은 금액에 아주 근접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KBS 구성원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시민들은 당파성과 확증편향에서 자유롭고 속의를 통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KBS 수신료 공론조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지적한 ‘수신료의 가치’는 KBS 구성원들이 웃음을 머미며 들어야 할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KBS 이사 경험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두 가지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의 다양화를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공영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당파성과 확증편향을 넘어서는 공영적 ‘일반의지’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을 택할지,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여러분께 숙제로 드립니다.

2022 방송법 개정투쟁 일지

4월 11일

현업언론단체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4월 28일

언론노조, 의원 171명 공동발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성명 발표

5월 3일

KBS본부,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 사내 피케팅 및 1인 시위



5월 11일

언론노조, 방송법 개정안 촉구 결의 대회



5월 24일

언론노조, 방송법 처리 촉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



9월 7일

언론노조, 정기국회 방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시민 홍보



9월 21일

언론노조, 공영방송 정치독립 입법 D-100 집중행동 결의대회



9월 22일 ~

정기국회 방송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9월 이후

방송법 개정 촉구 전국 현수막 게시



10월 13일

언론노조, 방송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



10월 18일

언론노조, 방송법 개정 촉구 정의당 정책 간담회



2022년도 대국민 듣기평가

대통령 이해영역

Q. 다음 중 ㉠에 들어갈 말은?



- ① 바이든
- ③ 발리면
- ② 날리면
- ④ 말리면



정답해설 KBS · MBC · EBS 공영방송 정치독립 시급!

문제가 틀렸습니다.

A+

진짜 문제는 언론탄압입니다!

[해설] '바이든이나' '날리면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막말과 비속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권력이 공영방송을 '진상조사'하고 '민영화하겠다'고 나서서 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대 양당은 공영방송 사장·이사 자리를 나눠먹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시청자와 언론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후견주의 타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이 답입니다.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5만명 서명이 필요합니다!

접속
방법

방법 1 | QR코드로 접속하기

방법 2 | 검색창에 [국민동의청원] 입력하여 접속 후,
[공영방송 정치독립] 검색하여 청원페이지 접속

방법 3 | 주소창에 bit.ly/공영방송정치독립 입력해 접속

동의
방법

1단계 | 청원 첫 화면 하단에서 [동의하기] 클릭

2단계 | [비회원 인증하기] ➡ [문자로 인증하기]

3단계 | 인증 후 청원화면에서 [동의하기] 누르면 끝!



국민청원QR



시민

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승인 안 해주면 언론자유는 쪽팔려서 어떡하죠?